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 목 차

## ■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조짐 .....	7
3. 주력산업 위기의 원인 .....	20
4. 주력산업의 활로 .....	37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실 : 주 원 이 사 대 우 (02-2072-6235,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 ■ 개요

(주력산업의 의미) 주력산업은 경제의 핵심산업 (key industry), 선도산업 (leading industry), 수요창출산업 (Demand pull industry)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주력산업의 조건) 주력산업은 경제 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되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해외수요 확보가 가능함과 동시에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확산의 핵심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군은 한국경제의 현실상 제조업(중화학공업 및 ICT제조업)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주력산업을 ① 철강, ② 유화, ③ 기계, ④ 자동차, ⑤ 조선, ⑥ 반도체, ⑦ 디스플레이, ⑧ 스마트폰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비중을 가지는 산업**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29%)보다 서비스업(53%) 비중이 더 높으나, 비금융 민간 서비스업 비중(32%)과 비슷한 수준이다.

②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 :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상승 추세에 있는 반면, 서비스업 성장 기여율은 하락 추세이다.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1990년대 56.1%에서 2000년대 51.2%로 낮아졌으며 2010년대에는 다시 49.5%로 하락하였다. 한편 제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1990년대 24.4%에서 2000년대 33.6%로 높아졌으며 2010년대에도 이와 비슷한 32.2%의 기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서비스업 비금융 민간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30.6%로 제조업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대한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할 경우 제조업의 실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③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 :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취업자수의 4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2017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수는 456만 6,000명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수 1,868만 3,000명의 24.4% 수준이다. 그러나 서비스업 내 공공적 성격 업종에 대한 비중이 서비스업 전체의 26%, 고부가 서비스업 부문 비중이 25%로 나머지 49%가 저부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특히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2016년 현재 제조업 내 정규직 비중은 86%이며 서비스업은 64% 수준이다. 임금 측면에서도 2016년 기준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 비중은 제조업 내 47%로 서비스업(38%, 전문직 제외시 27%)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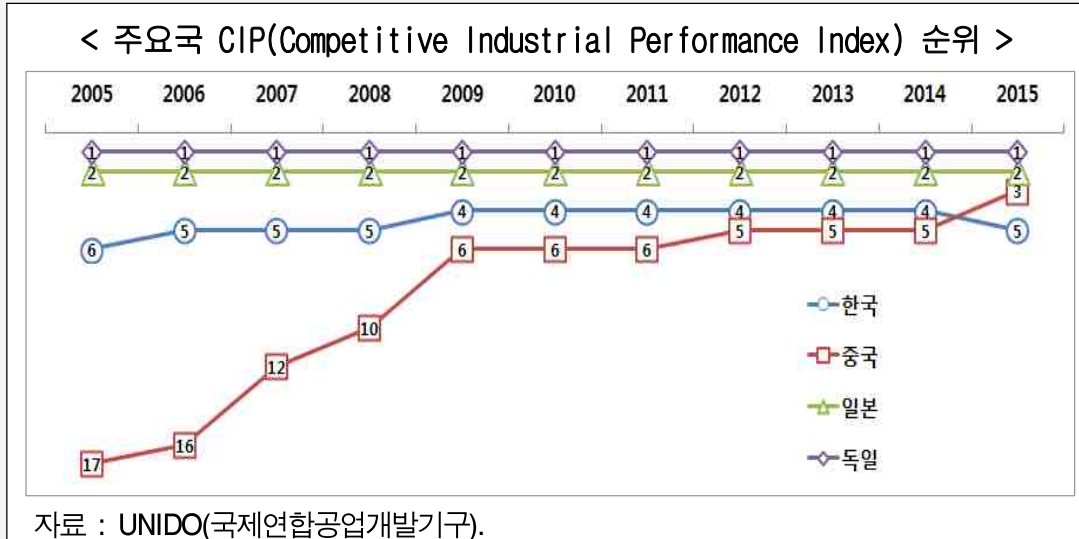
④ **경기 선도산업이면서 국제경쟁력 보유 산업** : 제조업은 경기 선도산업이면서 해외수요 확보 및 외화가득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2017년 제조업 수출은 5,774억

달러로 제조업수출/총수출 비중은 86.8%에 달한다. 특히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199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외화가득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반면 2017년 기준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345억 달러인데, 이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⑤ **전체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견인하는 산업** : 경제 발전의 동력은 효율성의 확보이며 이 부분에서 제조업은 기술발전과 생산성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평가된다. 1983년 이후 제조업 연구개발투자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측면에서 2016년 현재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 기준) 수준은 2.2배에 달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조짐**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CIP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4년까지는 중국에 앞섰으나 2015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하였다. 중국은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하였고, 2015년에는 한국과 미국(4위)을 제치고 3위로 부상하였다. 한편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09~2014년 4위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 5위로 하락하면서 현재까지도 중국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대 주력산업별로 가지는 위기 현상들을 살펴보면, ① 철강산업은 세계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 공급의 주도권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이 고전하고 있다. ② 유화산업은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중성장 경로 진입과 중국 자급률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③ 최근 기계산업은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업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

으나, 근본적으로 기술경쟁력은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④ 자동차 산업은 주요 수출 시장과 내수시장에서 고전하는 전방위적 수요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생산성이 취약하고 미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도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⑤ 조선업 경기는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수주 불황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그 미약한 규모의 수주마저도 한국이 중국에게 밀리는 양상이다. ⑥ 반도체산업은 현재 국내 주력산업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산업 주력 품목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실정이나 그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⑦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력 품목은 LCD이나 경쟁 심화로 수출과 무역수지 실적이 빠르게 악화중이다. 다만, 고부가 제품인 OLED의 수출이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⑧ 스마트폰 산업은 한 때 한국 수출의 핵심산업이기도 하였으나, 최근 세계시장점유율 하락과 해외생산비중 급증으로 주력산업의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 주력산업 위기의 원인

### ① 경제·산업 구조의 낙후성(準加工貿易형 산업구조 및 薄利多賣형 생산구조)

한국경제가 가지는 비효율적인 경제 및 산업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졌으나 투자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기술력과 부가가치 창출력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05년 4.7%에서 2011~15년 3.2%로 1.5%p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1.0%p가 효율성과 기술력을 의미하는 TFP(총요소생산성) 기여도 축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6년 현재 한국의 R&D투자는 경제규모(GDP) 대비 4.2%로 세계 2위의 수준을 기록중이다. 그러나 그 투자 효율성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기술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이 모두 흑자인 가운데 한국만 적자를 지속중이다. 기술력의 차이는 결국 부가가치 창출력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한국의 2015년 기준 제조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산출)은 25.5%로 OECD 분석대상국 31개국중 25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 ②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저성장 및 교역탄성치 하락으로 만성수요부족)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교역탄성치 하락으로 만성적인 글로벌 수요 부족 현상에 직면하면서, 해외수요에 의존하는 우리 제조업에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지속중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세계경제성장률은 2003~07년 연평균 5.1%에서 2012~17년 연평균 3.5%로 하락)되면서 금융위기이전의 과잉생산능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수요회복이 더딘 가운데, 2015년 이후에는 신흥국들도 수요부족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를 보면 2003~07년 연평균 1.64배

에서 2012~17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0.94배로 하락하였다.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교역탄성치의 하락으로 수출(해외수요)에 의존하는 국내 제조업에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1년 80.5%에서 2017년 72.6%로 지속적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2010년 월평균 80.8%에서 2017년 102.7%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 ③ 양날의 칼 중국경제 (기회요인에서 위협요인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증장기적 위협요인은 한국 제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언젠가는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이며, 단기적 위협요인은 이제는 중국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의 수요처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상대라는 점이다.

한국 제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2017년 현재 대중국수출/총수출 비중)는 24.8%이며, 대중국 제조업 투자비중(대중국투자/총해외투자)은 27%로 2002년 이후 누적 해외투자 기준으로는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출 부문만을 볼 때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수출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6년 현재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의 18.3%, GDP의 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중국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부진, 투자 부실화 등으로 이어져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2016년 한국의 8.2배)가 크다는 장점(충분한 시장수요, 규모의 경제로 비용절감, 테스트 베드)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제조업 R&D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산업 효율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2014년 R&D투자 규모는 2,525억 PPP달러로 미국(2,215억 PPP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은 509억 PPP달러로 중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규모의 경제'적 이점은 중국 기업들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춘(Fortune) 세계 500대 기업수를 보면 중국은 2000년 12개에서 2017년 103개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11개에서 15개로 4개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R&D 규모 1,000대 기업 수는 한국이 25개인 반면, 중국은 100개로 한국 기업수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중국 기술력의 전반적인 수준은 아직은 한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2008년 2.7년에서 2016년 1.0년으로 빠르게 축소중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고기술 수출(R&D집약도가 높은 업종)비중은 1990년 한국이 18.0%, 중국이 6.4%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11.6%p가 높았으나, 2015년 현재 한국(26.8%)과 중국(25.8%)의 고기술 수출 비중은 비슷한 수준에 와있다.

#### ④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비용)

노동시장에서 노사협력, 고용관행, 임금결정 등에 경직성이 과도하여 노동생산성 경쟁력이 취약하고, 특히 그동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주도하던 제조업 노동생산성마저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중 2017년 기준 노사 부문의 경우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137개국중)에 불과하다. 또한 정리해고비용 112위, 고용/해고관행 88위, 임금결정유연성 62위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한 모습이다. 특히 전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2002년 이후 민간협약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은 물론 노동생산성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최근 3년(2015~2017년)만 보아도 민간협약임금인상률은 연평균 3.6%로 노동생산성증가율(-7.5%) 및 소비자물가상승률(1.2%)을 크게 넘어선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생산액, current PPP 기준)은 미국의 49.5% 수준에 불과하며 OECD 35개국 중 29위에 해당될 정도로 취약한 모습이다.

한편 그동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주도하던 제조업 노동생산성마저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2011년(102.5p)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되면서 2016년에는 92.3p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산출량지수가 2011년 106.0p에서 2016년 109.3p로 3.3p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노동투입량지수는 2011년 103.4p에서 2016년 118.5p로 15.1p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⑤ 비우호적 기업 환경 (체감하기 어려운 규제 개혁)

국내 기업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지표로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는데 한국시장에서의 규제 부담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WEF의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를 보면 2017년 현재 한국은 95위로 2017~2018년 통계치가 추정된 137개국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일본, 중국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거 모든 정부들마다 규제개혁을 중점국정과제로 두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규제 수나 강도가 확대되고 있다. 2009~2016년의 기간 동안 행정부의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건수는 총 8,878건(연평균 1,110건)에 달한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입법이 모두 규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새로이 만들어지는 법은 민간 부문(국민과 기업의 행동)에 대한 제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건수의 상당 부분이 규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7대 국회('04년 5월~'08년 4월)의 총입법 건수는 3,773건에 불과하였으나, 19대('12년 5월~'16년 4월)에는 7,429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국회에서 생산되는 입법중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이 압도적으로 많아 어찌 보면 국회가 규제를 양산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 의원입법/총입법 비율은 17대('04년 5월~'08년 4월)에는 59.3%에 불과하였으나, 18대('08년 5월~'12년 4월) 62.6%, 19대('12년 5월~'16년 4월) 72.0%, 20대('16년 5월~'20년 4월)에도 72.1%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 주력산업 위기의 원인 >

<p><b>① 경제산업구조의 낙후성 : 準加工貿易형 산업구조 및 薄利多賣형 생산구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성장률 하락의 3분의 2가 TFP 급락에 원인</li> <li>• 세계 2위 R&amp;D투자 규모에도 기술무역수지 적자 지속</li> <li>• 제조업 부가가치율, 25.5%로 OECD 25위('15년)</li> </ul>
<p><b>② 글로벌 성장패러다임 변화 : 저성장 및 교역탄성치 하락으로 만성수요부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경제성장률('03~'07년 5.1% → '12~'17년 3.5%), 교역탄성치(1.64배 → 0.94배)</li> <li>• 만성적 수요 부족으로 제조업 평균가동률, '11년 80.5%에서 '17년 72.6%로 하락</li> <li>•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비율), '10년 월평균 80.8%에서 '17년 102.7%로 상승</li> </ul>
<p><b>③ 양날의 칼 중국경제 : 기회요인에서 위협요인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의 대중국 의존도, 수출('17년) 24.8%, 투자('02~'17년 누적) 40%</li> <li>• 중국 내수시장 규모 한국의 8.2배('16년), 중국 제조업 R&amp;D투자 한국의 5배('14년)</li> <li>• Fortune 세계 500대 기업수, 한국15개, 중국 103개('17년)</li> </ul>
<p><b>④ 노동시장의 경직성 :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비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F 경쟁력('17년), 노사협력 130위, 정리해고비용 112위, 고용/해고관행 88위</li> <li>• 민간협약임금상승률('15~'17년), 연평균 3.6%로 노동생산성증가율(-7.5%)을 상회</li> <li>• 노동생산성('16년), 미국의 49.5% 수준, OECD 29위</li> </ul>
<p><b>⑤ 기업 환경의 악화 : 체감하기 어려운규제 개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F의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 정도 순위('17~'18년), 95위</li> <li>• '09~'16년 신설/강화 규제 건수, 총 8,878건(연평균 1,110건)</li> <li>• 국회 입법건수, 17대 국회 3,773건, 19대 7,429건, 19대 입법건수중 72%가 의원입법</li> </ul>

■ 주력산업의 활로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의 원천 및 분배의 재원이 되는 산업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리부팅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현재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셋째**, 산업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역량 확보 및 정부의 실효적 지원 간 유기적 결합이 요구된다. **넷째**,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기업의 유연성 및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對 중국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산업정책에 노동시장정책을 맞추어야 한다. **일곱째**, 산업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기업활력 부활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 1. 개 요

### (1) 주력산업의 의미

- (주력산업의 의미) 주력산업은 핵심산업 (key industry), 선도산업 (leading industry), 수요창출산업 (Demand pull industry)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sup>1)</sup>
  - 핵심산업 (key industry) : 경제 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산업
  - 선도산업 (leading industry) : 경제 고도화 발전 체계의 맨 앞에서 기술 및 생산성 혁신을 선도하는 산업
  - 수요창출산업 (Demand pull industry) : 시장수요에 따라가는 산업이 아니라 시장수요를 만들어 내는 산업

### (2) 주력산업의 조건

- 주력산업은 경제 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되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해외수요 확보가 가능함과 동시에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확산의 핵심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군은 한국경제의 현실상 제조업(중화학공업 및 ICT제조업)으로 판단됨
  -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주력산업을 ① 철강, ② 유화, ③ 기계, ④ 자동차, ⑤ 조선, ⑥ 반도체, ⑦ 디스플레이, ⑧ 스마트폰으로 범위를 한정함<sup>2)3)</sup>

1) 저자의 자의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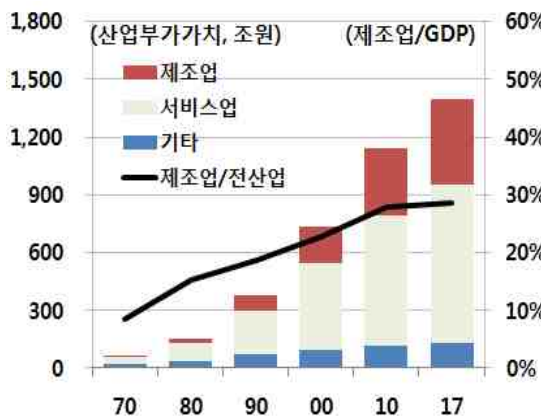
2) 이외 가진 등과 같은 다른 주력산업들도 포함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성, 산업의 중요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8대 품목으로 한정함.

3) 참고로 산업연구원의 12대 주력산업은 ① 음식료, ② 섬유, ③ 철강, ④ 정유, ⑤ 석유화학, ⑥ 일반기계, ⑦ 자동차, ⑧ 조선, ⑨ 가전, ⑩ 반도체, ⑪ 디스플레이, ⑫ 정보통신기기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13대 주력수출 품목은 ① 섬유, ② 철강, ③ 석유제품, ④ 석유화학, ⑤ 일반기계, ⑥ 자동차, ⑦ 자동차부품, ⑧ 선박, ⑨ 가전, ⑩ 컴퓨터, ⑪ 반도체, ⑫ 디스플레이, ⑬ 무선통신기기임.

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비중을 가지는 산업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더 높으나, 비금융 민간 서비스업 비중과 비슷한 수준
  - 2017년 실질가치 기준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서비스업 비중 53%보다는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서비스업은 비금융 민간부문<sup>4)</sup>만을 고려하면 그 경제적 비중이 32%로 크게 낮아져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산업 부문으로 평가
  - 2016년 기준 주요국의 제조업/GDP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29.3%로 미국(11.7%), 독일(26.9%), 일본(20.0%) 등 제조업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특히 한국의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신흥국인 중국(27.5%)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제조업은 현재 한국에서 중요한 산업 부문의 위치를 차지함

< 한국 제조업/GDP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 주요국별 산업 비중(2016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UN통계를 이용한 계산.

4) 공공행정·국방,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공공적 성격이 높은 업종을 제외한 부문.

②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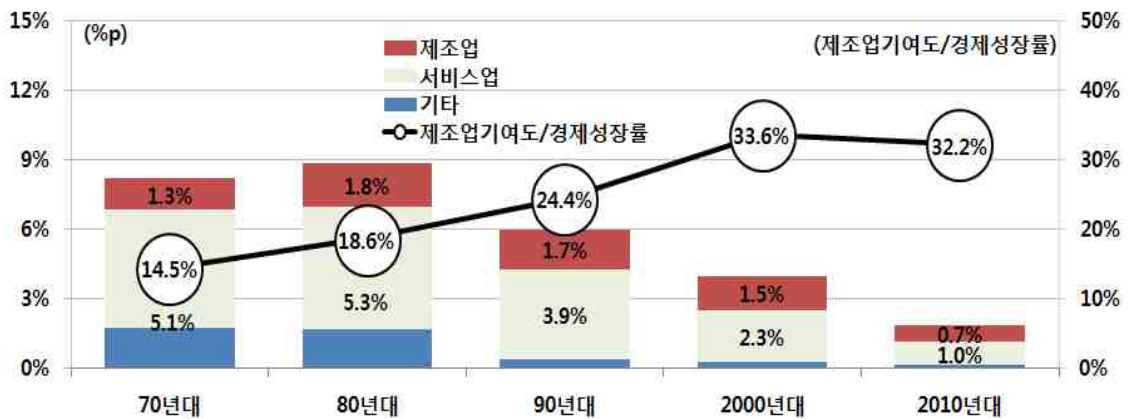
-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상승 추세에 있는 반면, 서비스업 성장 기여율은 하락 추세를 형성

-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1990년대 56.1%에서 2000년대 51.2%로 낮아졌으며 2010년대에는 다시 49.5%로 하락함
- 한편 제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1990년대 24.4%에서 2000년대 33.6%로 높아졌으며 2010년대에도 이와 비슷한 32.2%의 기여율을 기록함
- 한편 2010년대 서비스업 비금융 민간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30.6%로 제조업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임

-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를 감안할 시 실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실질 가치 기준 50% 이상으로 추정

- 외형상 제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10~2017년 32.2% 수준이며 서비스업은 49.5%를 기록함
- 그러나 제조업의 생산 파급경로를 통한 타 산업 후방효과와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가계소득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제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됨

< 주요 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 및 제조업 기여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5) 당해년도 산업부가가치증가율 × (전년도 산업부가가치/GDP) ÷ 당해년도 경제성장률.

③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

-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취업자수의 4분의 1 규모에 불과

- 2017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수는 456만 6,000명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수 1,868만 3,000명의 24.4% 수준에 불과함
- 그러나 서비스업 내 업종별로 보면 공공적 성격 업종에 대한 비중이 서비스업 전체의 26%, 고부가 서비스업 부문 비중이 25%로 나머지 49%가 저부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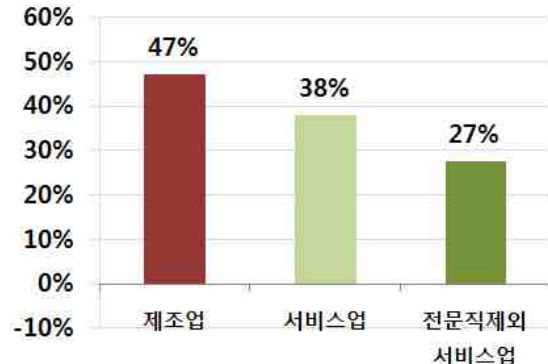
- 특히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력이 높다고 평가

- 2016년 현재 제조업 내 정규직 비중 86%인 반면 서비스업은 64%에 그치는 모습임
- 특히 2004년 이후 서비스업 내 정규직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제조업은 10%p가 증가함
- 임금수준도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2016년 기준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 비중에서 제조업은 47%로 서비스업 내 비중 38%보다 높으며, 특히 전문직을 제외한 서비스업 비중(27%)과 큰 격차를 가짐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내 정규직 비중 > < 월300만원 이상 소득자 비중(2016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④ 경기 선도산업이면서 국제경쟁력 보유 산업

- 제조업은 경기 선도산업이면서 해외수요 확보 및 외화가득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

- 2017년 제조업 수출은 5,774억 달러(제조업 제품이 아닌 1차 산업 생산품도 포함)로 GDP(1조 5,032억 달러)의 38.4%의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제조업수출/총수출 비중은 86.8%로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경제의 외화가득 핵심산업의 역할을 담당함
- 반면 서비스업 수출은 87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3.1%, 제조업 수출의 15% 수준에 불과함

- 상품수지 흑자는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며 서비스수지 적자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

- 2017년 기준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1,199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과 수입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반면 2017년 기준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345억 달러인데, 이는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비스수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가짐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규모 >



자료 : 한국은행.

<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



자료 : 한국은행.

⑤ 전체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견인하는 산업

- 경제 발전의 동력은 효율성의 확보이며 이 부분에서 제조업은 기술발전과 생산성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평가
- 1983년 이후 제조업 연구개발투자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2015년 기준 제조업 R&D 투자 규모는 45조 8,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의 90%를 차지함
  - 특히 제조업R&D투자/전체R&D투자 비중은 2009년 86%에서 2015년 90%로 상승 추세임
  - 한편 2015년 건설업은 8,000억 원, 서비스업은 4조 1,000억 원 수준에 그침
- 2016년 현재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 기준) 수준은 2.2배에 달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
  - 외환위기 이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제조업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2016년 현재 제조업 인당 노동생산성은 10.5억 원으로 서비스업의 4.5억 대비 2.2배에 달함

< 주요 산업 R&D 규모 >



자료 : NTIS.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6)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6) OECD, 통계청,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 2.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조짐

### ○ 제조업 경쟁력 하락

-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CIP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4년까지는 중국에 앞섰으나 2015년에 중국에 추월당하는 모습
  - 중국은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 2015년 한국과 미국(4위)을 제치고 3위로 부상
  -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09~2014년 4위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 5위로 하락하는 모습임
  -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순위 격차는 2005년 한국이 6위, 중국이 17위로 11단계를 한국이 앞섰으나, 2015년에는 한국이 중국에 2단계가 뒤지는 모습임
  - 한편 독일은 경쟁력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2위를 지키고 있음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서는 매년 CIP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동 지수는 1인당 지표(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등), 중고기술허 비중,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내 위상, 수출 지표, MVA 지표 등으로 평가



자료 :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① 철강

○ 세계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 공급의 주도권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 가지는 것으로 평가

- 글로벌 철강 산업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철강설비가동률 70%를 하회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불황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철강산업의 공급능력 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특히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철강설비가동률은 2017년 68.7%로 2008년의 80.3%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조강생산량은 거의 정체되는 모습이나 중국의 생산량은 2013년까지도 증가하는 모습

-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조강생산량은 0.7억 톤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일본도 1억 톤 내외를 유지함
- 그러나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2007년 4.9억 톤에서 2016년 8.1억 톤으로 급증하여, 한국의 조강생산량은 중국의 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세계 철강설비가동률 >



자료 : OECD.

< 한중일 조강생산량 >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고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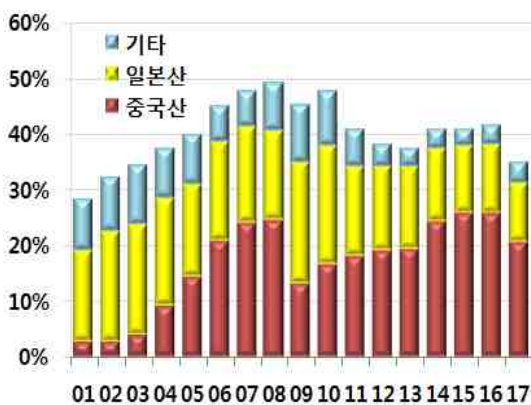
- 2017년 현재 국내 철강시장에서 외국산 점유율은 35% 수준이며 이중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20%p 내외를 유지

- 국내 철강시장에서 외국산 점유율은 2001년 28%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중국산 제품 점유율은 2001년 2.7%에서 2008년 24% 까지 빠르게 상승하다가 최근까지 20% 내외 수준을 유지함
-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중국산 점유율이 하락(2016년 25.6%에서 2017년 20.5%)하고 일본 점유율도 하락(2016년 12.3%에서 2017년 10.6%)함에 따라 국산재 점유율은 같은 기간 58.4%에서 65.0%로 상승함

- 한편 최근 우리나라 철강 수출품의 중국 및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모습

- 한국 철강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6년 17.1%에 달하였으나 2017년 15.1%로 급락함
- 한편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14년 7.5%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7년에는 5.9%로 크게 낮아짐

< 국내철강시장 외국산 시장점유율 >



자료 : 한국철강협회.

< 철강7)의 미국 및 중국 시장점유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계산.

② 유화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중성장 경  
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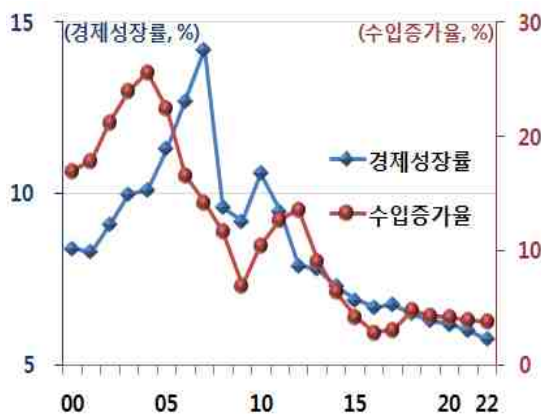
- 중국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증가율도 자  
연스럽게 하락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로 한 자릿수 단위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에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sup>8)</sup>
- IMF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6%대 후반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경에  
는 5%대로 하락함
- 성장률 하락은 수입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실제로 중  
국의 수입증가율(실질 기준)은 2012년 13.6%에서 2017년 3.1%로 하락함

- 특히 유화 산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저성  
장 국면 진입에 따른 중국시장 수요 위축은 핵심 위협요인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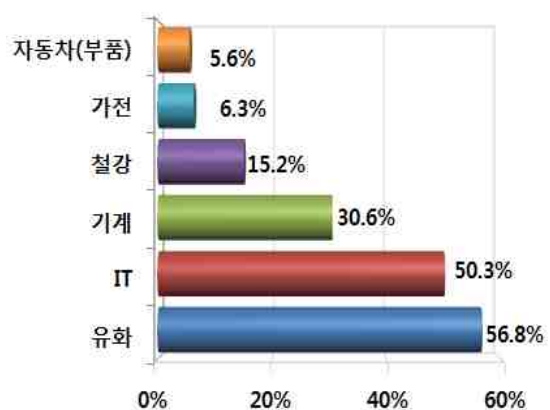
- 한국의 수출산업별 중국시장 의존도에서 유화 산업은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중국 경제성장률 및 수입증가율 >



자료 : CEIC, IMF.

< 한국 산업별 대중수출 비중(2017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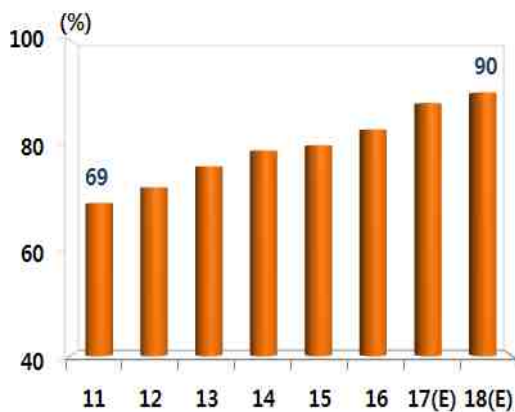
주 :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계산.

7) 철강(HS72) 및 철강제품(HS73) 기준.

8) 중국과 같은 대규모 개방경제(large scale open economy)는 그 경제적 특성상 고성장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불가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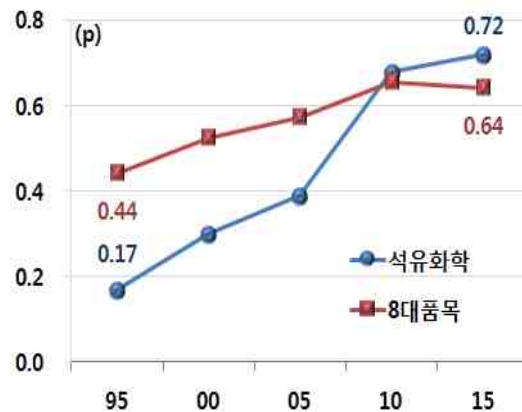
- 또한 중국의 유화 제품에 대한 수입대체전략으로 중국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반사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우려
  - 중국의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범용제품<sup>9)</sup>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합성원료,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의 석유화학 범용제품에 대한 중국의 자급률은 2011년 69%에서 최근 90%로 급등
  - 한중간 유화 산업의 수출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업스트림 제품으로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존재
    - 한중간 수출경합도지수(수출경합도지수가 1이면 국가 간 수출구조가 완전 동일 의미)를 보면 1995년에는 0.17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0.72로 크게 상승
    - 이에 따라 1995년에는 우리 주력 8대 수출품목 평균치(0.44)에 유화 수출경합도가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5년은 오히려 유화의 수출경합도가 8대 주력 수출품목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중국의 유화산업 자급률 제고 정책이 진행중인바 한중간 수출경합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 중국의 석유화학 범용제품 자급률 >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현대경제연구원.

< 한중 수출경합도 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9) 합성원료, 합성수지, 합성섬유를 의미.

③ 기계

○ 최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업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술경쟁력은 취약하다고 평가

- 2017년 기준 기계 품목<sup>10)</sup>의 무역수지는 29.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고기술·고부가 제품<sup>11)</sup>인 정밀기계의 경우 155억 달러 적자를 시현
  - 기계 품목중 기초산업기계 및 산업기계의 무역수지는 2017년 각각 49.4억 달러 및 76.4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함
  - 그러나 정밀기계 부문의 무역수지는 15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계 품목 전체의 무역수지는 29.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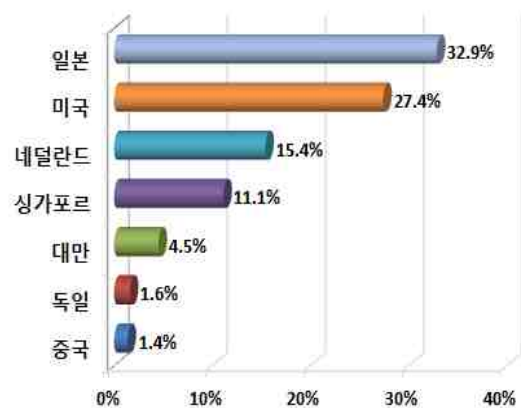
- 정밀기계 품목의 수입은 일본 및 미국 산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
  - 2017년 한국의 정밀기계 수입액은 약 240억 달러 규모이며 이 중 32.9%가 일본으로부터, 27.4%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이외 네덜란드 15.4%, 싱가포르 11.1%, 대만 4.5%, 독일 1.6%, 중국 1.4%의 순서를 가짐

< 한국 기계품목 무역수지(2017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계산.

< 한국 정밀기계 품목 수입의 국가별 비중(2017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계산.

10) 본 보고서에서의 기계 품목은 기초산업기계(MTI, 71), 산업기계(72), 정밀기계(73)임.

11)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초산업기계 및 산업기계의 단가는 kg당 10달러대인 반면, 정밀기계의 단가는 227억 달러임.

④ 자동차

○ 자동차 산업은 주요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에서 고전하는 전방위적 수요 부족 사태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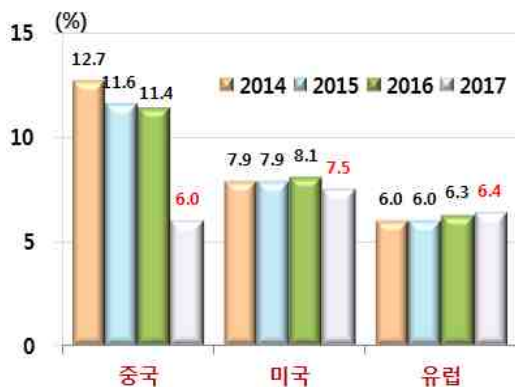
- 우리 자동차 제품의 미국시장점유율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점유율도 급락하는 모습

- 미국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2016년 8.1%에서 2017년에는 7.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중국시장에서는 2014년 이후 점유율이 뚜렷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그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져 6% 내외 수준의 시장점유율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 내수시장에서는 수입차 점유율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은 2010년 6.9%에서 2015년 15%대로 상승하였으나 2016년 일시적인 원인으로 14%대로 하락함
- 그러나 2017년 다시 15%대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16%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해외시장의 한국차 점유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국 자동차 협회통계를 이용한 추정.<sup>12)</sup>

<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 >



자료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현경연.

주 : 2018년 현경연 추정.

12) 중국(全国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미국(Motor Intelligence), 유럽(ACEA: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재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생산성도 취약한데다가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게 하는 연구개발투자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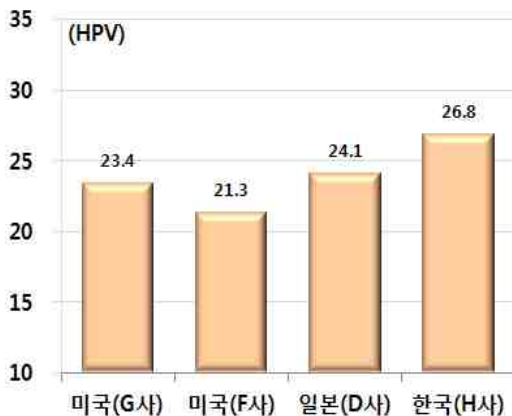
-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성이 주요 자동차 강국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5년 기준 자동차 1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HPV(Hour Per Vehicle) 값을 보면, 한국(H사)이 26.8시간으로 미국(G사) 21.3시간, 미국(F사) 23.4시간, 일본(D사) 24.1시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6년 기준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은 한국 5사 평균이 12.2%인 반면, 일본(D사)가 7.8%(2012년), 독일(V사)가 9.5%로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 우려되는 점은 자동차의 미래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R&D집약도 측면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

- 2016/2017년 기준 주요국 자동차 기업들의 R&D집약도를 보면 독일 기업들이 5.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의 경우 2.6%로 주요 경쟁국 기업들보다 투자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자동차기업 생산성(2015년 HPV) >



자료 : 자동차산업협회.

< 주요국 자동차기업 R&D집약도<sup>13)</sup>(2016/17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European Commission 통계를 이용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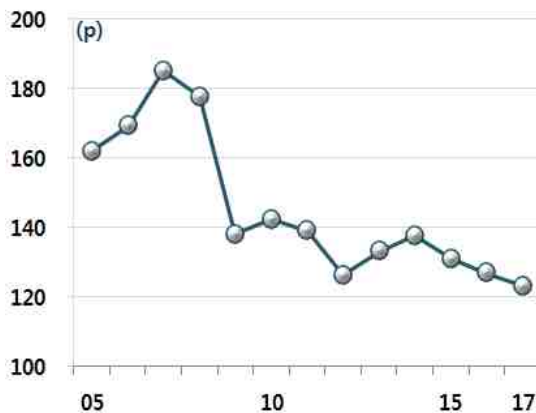
13) 한국 2개사, 미국 3개사, 일본 7개사, 독일 3개사, 프랑스 2개사.

⑤ 조선

○ 조선업 경기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수주 불황이 장기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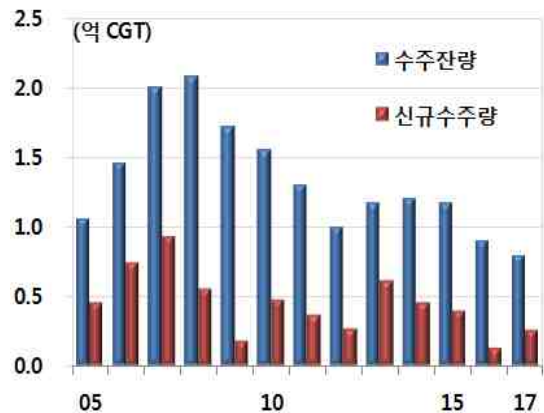
- 신조선가 지수(새로이 선박을 건조할 때 단가를 의미)로 조선업 경기를 살펴 보면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신조선가는 2007년의 185p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중임
  - 이에 따라 2017년 신조선가는 123p로 최대 호황국면이었던 2007년의 185p 대비 66.5%에 불과한 수준임
- 2017년 글로벌 전체의 조선업 수주잔량은 2007년 대비 40%, 신규수주량 27%에 불과
  - 2017년 글로벌 전체의 조선업 수주잔량은 0.8억 CGT로 2007년의 2.0억 CGT 대비 40%에 불과한 상황임
  - 특히 수주 잔량의 상당 부분이 신조선가가 낮은 수준에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선박을 건조하더라도 큰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2017년 글로벌 전체의 조선업 신규수주량은 0.3억 CGT로 2007년의 0.9억 CGT 대비 27% 정도로 선박 발주가 미약함

< 글로벌 신조선가지수 >



자료 : Clarkson.

< 글로벌 수주잔량 및 신규수주량 >



자료 : Clarkson.

○ 글로벌 수주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미약한 규모의 수주마저 중국에게 밀리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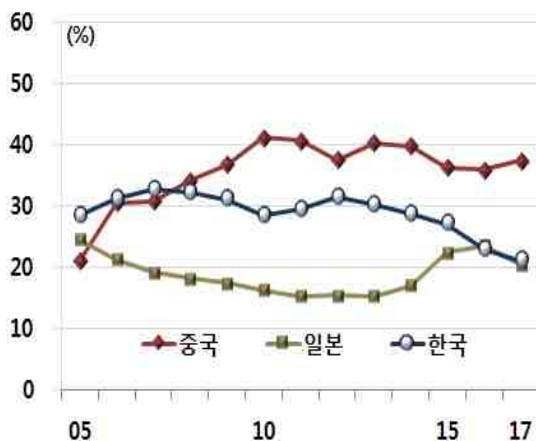
- 글로벌 전체의 수주잔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마저도 최근 한국의 점유율이 중국에 뒤지는 상황임

- 중국의 수주잔량 점유율은 금융위기 이후 4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2012년 31.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7년 기준 21.1%에 불과함
- 한편 일본은 2015년 이후 20%대로 올라서면서 2017년 현재 20.4%로 한국과 비슷한 점유율 수준을 기록중임

- 특히 신규수주량에서도 한국이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산업 내 일감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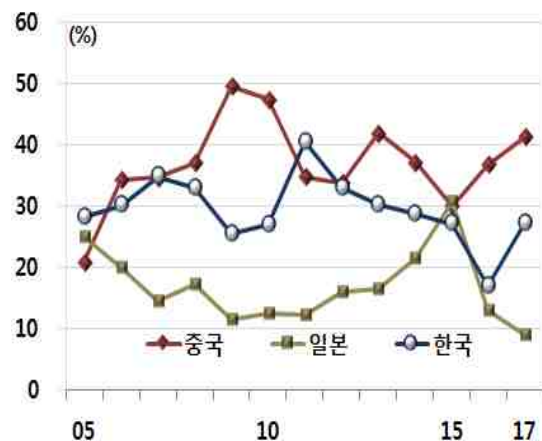
- 2017년 신규수주량 점유율은 한국 27.3%로 중국의 41.3%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 한편 일본은 2015년에 신규수주량 점유율에서 근래 최대 실적인 30.8%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17년에는 8.9%로 하락함

< 한중일 조선 수주잔량 세계시장점유율 >



자료 : Clarkson.

< 한중일 조선 신규수주량 세계시장점유율 >



자료 : Clarkson.



⑥ 반도체

○ 현재 가장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도 주력 품목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나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

- 현재 한국 수출의 주력은 반도체 산업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17.4%의 비중을 기록

- 2017년 반도체 수출액은 996.7억 달러로 ICT 수출(1,975.7억 달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수출 5,736.9억 달러의 17.4%를 차지함
- 반도체 품목별로는 전체 ICT 수출에서 메모리반도체가 34.0%, 시스템반도체가 12.8%를 차지함

- 그러나 반도체 수출의 주력 부문은 다운스트림 품목인 메모리반도체이며 시스템반도체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

- 메모리반도체(DRAM 및 NAND)의 2017년 세계시장 규모는 1,302억 달러로 이중 한국 반도체 생산액은 약 807억 달러로 62%의 시장점유율 차지함
- 한편 시스템반도체의 세계시장 규모는 2,304억 달러로 이중 한국 반도체 생산액은 약 90억 달러 내외로 4% 점유율에 그치고 있음

- 특히 한국 주력제품인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2~3년 내 중국의 본격 진입이 예상되는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점유율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 한국 메모리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의 세계시장점유율(2017년) >



자료 : 산업부, 현대경제연구원.

주 : 메모리반도체는 DRAM 및 NAND.

⑦ 디스플레이

○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력 품목은 LCD이나 경쟁 심화로 인한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과 무역수지 실적이 빠르게 악화중, 다만 고부가 제품인 OLED의 수출이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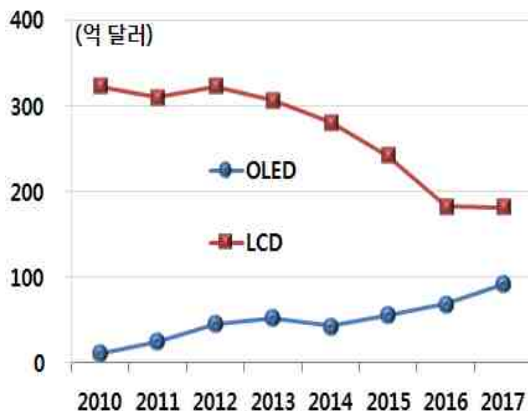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 주력 제품인 LCD 수출과 무역수지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시장 과열과 경쟁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LCD 수출액은 2010년 323.3억 달러에서 2017년 181.6억 달러로 감소 추세를 지속중임
- LCD 무역수지도 수입이 크게 늘어 2010년 275.1억 달러에서 2017년 132.5억 달러로 50% 이상 감소

- 반면 OLED가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수출과 수지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년 내 중국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 격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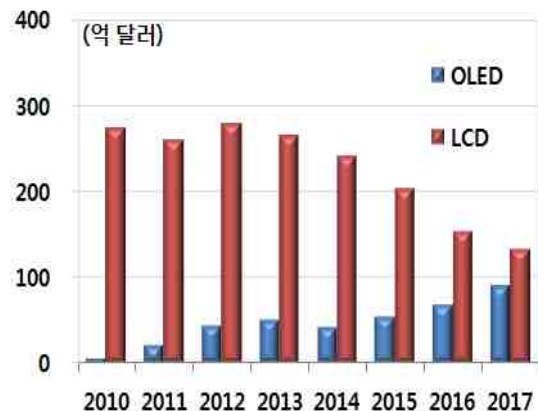
- OLED 수출액은 2010년 11.2억 달러에서 2017년 92.2억 달러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임
- OLED 무역수지는 수입분이 거의 없어 수출액과 유사한 규모를 지속중, 즉 2010년 5.4억 달러에서 2017년 89.9억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중국의 OLED에 대한 집중 투자로 향후 5년 내 중국산 OLED의 본격적 시장진입이 예상됨

< 디스플레이 수출액 규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디스플레이 무역흑자 규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⑧ 스마트폰

○ 스마트폰 산업은 시장점유율 하락과 해외생산비중 급증으로 주력산업의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최근 스마트폰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신흥기업과 미국 기업에 뒤쳐지는 모습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2015년 22.2%에 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19%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중국 3사의 세계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10.5%에서 18.4%로 빠르게 상승중임

- 특히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은 2013년 19.7%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17년에는 2% 미만으로 추락함

- 중국시장에서는 특히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중으로 중국 4사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20.3%에서 2017년 50%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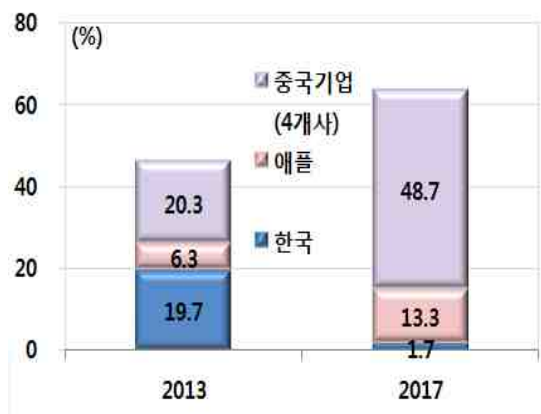
- 나아가 국내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이 2010년 15.9%에서 2017년 91.3%로 급증하고 부품 생산도 현지화가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산업은 한국 주력산업에서 멀어지는 모습

< 글로벌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



자료 : SA(Strategy Analytics).

< 중국시장 스마트폰 점유율<sup>14)</sup> >



자료 : SA(Strategy Analytics).

14) 2017년은 4분기 기준, 중국업체는 화웨이, 샤오미, 비보, 오포.

### 3. 주력산업 위기의 원인

< 주력산업 위기의 원인 요약 >

<p><b>① 경제산업구조의 낙후성 : 準加工貿易형 산업구조 및 薄利多賣형 생산구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성장률 하락의 3분의 2가 TFP 급락에 원인</li> <li>• 세계 2위 R&amp;D투자 규모에도 기술무역수지 적자 지속</li> <li>• 제조업 부가가치율, 25.5%로 OECD 25위('15년)</li> </ul>
<p><b>② 글로벌 성장패러다임 변화 : 저성장 및 교역탄성치 하락으로 만성수요부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경제성장률('03~'07년 5.1% → '12~'17년 3.5%), 교역탄성치(1.64배 → 0.94배)</li> <li>• 만성적 수요 부족으로 제조업 평균가동률, '11년 80.5%에서 '17년 72.6%로 하락</li> <li>•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비율), '10년 월평균 80.8%에서 '17년 102.7%로 상승</li> </ul>
<p><b>③ 양날의 칼 중국경제 : 기회요인에서 위협요인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의 대중국 의존도, 수출('17년) 24.8%, 투자('02~'17년 누적) 40%</li> <li>• 중국 내수시장 규모 한국의 8.2배('16년), 중국 제조업 R&amp;D투자 한국의 5배('14년)</li> <li>• Fortune 세계 500대 기업수, 한국15개, 중국 103개('17년)</li> </ul>
<p><b>④ 노동시장의 경직성 :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비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F 경쟁력('17년), 노사협력 130위, 정리해고비용 112위, 고용/해고관행 88위</li> <li>• 민간협약임금상승률('15~'17년), 연평균 3.6%로 노동생산성증가율(-7.5%)을 상회</li> <li>• 노동생산성('16년), 미국의 49.5% 수준, OECD 29위</li> </ul>
<p><b>⑤ 기업 환경의 악화 : 체감하기 어려운 규제 개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F의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 정도 순위('17~'18년), 95위</li> <li>• '09~'16년 신설/강화 규제 건수, 총 8,878건(연평균 1,110건)</li> <li>• 국회 입법건수, 17대 국회 3,773건, 19대 7,429건, 19대 입법건수증 72%가 의원입법</li> </ul>

① 경제산업구조의 낙후성 (準加工貿易형 산업구조 및 薄利多賣형 생산구조)

한국경제가 가지는 비효율적인 경제 및 산업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졌으나 투자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기술력과 부가가치 창출력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비효율적 경제구조) 효율성이나 기술력이 아닌 자본과 노동 중심의 물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지속

- 한국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물량 투입 위주의 경제성장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효율성과 기술력을 나타내는 TFP의 기여도가 축소되었기 때문

-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7%에서 2011~15년 3.2%로 1.5%p 급락하는 모습임
- 성장률 축소분 1.5%p 중 3분의 2인 1%p가 TFP 기여도 하락에 기인, TFP 기여도는 2001~2005년 2.5%p에서 2011~15년 1.5%p로 1%p가 축소됨

- 향후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이 예상되며, 현재의 성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그 주된 원인은 효율성과 기술력의 부족(TFP 하락)에 있을 것으로 판단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TFP의 역할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 2.0%, 낙관적 2.7%, 비관적 1.8%로 예상됨

< 한국의 시기별 잠재성장률 및 생산요소의 기여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R&D투자의 비효율성) 한국의 R&D투자가 빠른 증가 속도를 지속함에 따라 2016년 현재 경제규모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 2위의 수준을 기록

-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경제규모(GDP) 대비 비율이 2000년 2.2%에서 2016년 4.2%로 급증

- 전체 R&D 투자(정부 + 민간) 규모는 2000년 13.8조 원에서 2016년 69.4조 원으로 5배가 증가함

- ※ 주체별로 보면 2016년 전체 R&D 투자 규모 69.4조 원 중 23.6%인 16.4조 원이 공공 부문 투자이며, 76.4%인 54.0조 원이 민간 부문 투자임

- R&D 투자(정부 + 민간) 규모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6%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기록함

- 이에 따라 R&D투자/GDP 비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4.2%로 증가함

-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가별 R&D/GDP 비율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

- 2016년 R&D투자/GDP 비율의 국가별 비중은 이스라엘이 4.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이 4.2%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한편 일본의 R&D투자/GDP 비율은 3.1%, 미국이 2.7%로 OECD 평균 2.4%보다 높은 수준임

- 반면 중국(2.1%)과 EU(1.9%)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비율을 기록함

< 한국의 R&D투입규모 및 R&D/GDP >



자료 : NTIS.

< 주요국 R&D/GDP 비중(2016년) >



자료 : OECD, NTIS.

○ R&D투자에 대한 경제적 할당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측면에서의 투자 효율성은 미흡

- 많은 자원 할당에도 불구하고 성과 측면에서 R&D투자의 효율성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 GDP에 대한 R&D투자의 탄성치(R&D투자가 1단위 투입되었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 단위)는 한국이 2003~2008년 6.63배를 기록하였으나 2009~2014년에는 4.74배로 하락함

- 2009~2014년 기준 R&D투자의 탄성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4.74배로 일본의 8.79배의 약 53.9% 수준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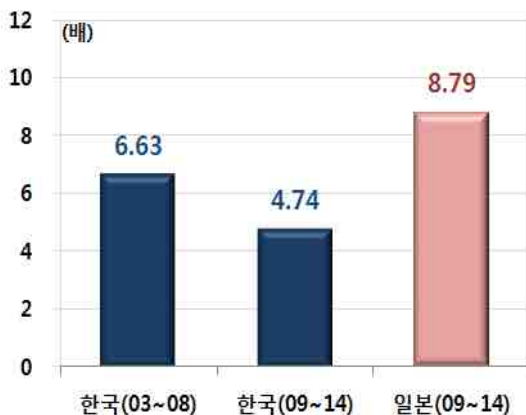
- 기술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이 모두 흑자인 가운데 한국은 적자를 지속

- 기술무역수지(기술수출액 - 기술도입액)는 한국이 2001년 20.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6년 현재(41.6억 달러 적자)까지 적자를 지속중임

- 국제통계 비교가 가능한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6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미국(419억 달러), 일본(276억 달러), 독일(181억 달러) 등 주요 제조업 강국들은 흑자를 지속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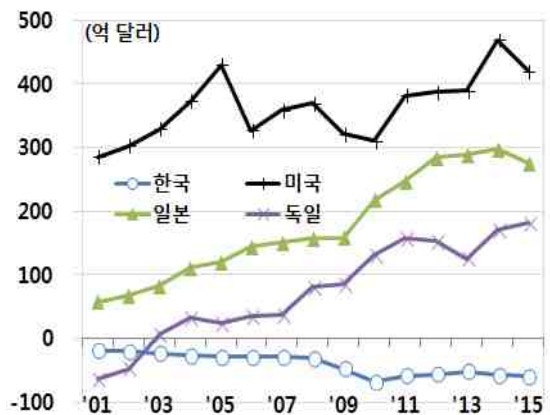
-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제조업 강국들은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시현함

< GDP에 대한 R&D스톡 탄성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주요 제조업 강국 기술무역수지 >



자료 : OECD, NTIS.

○ (부가가치 창출력 미약)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주요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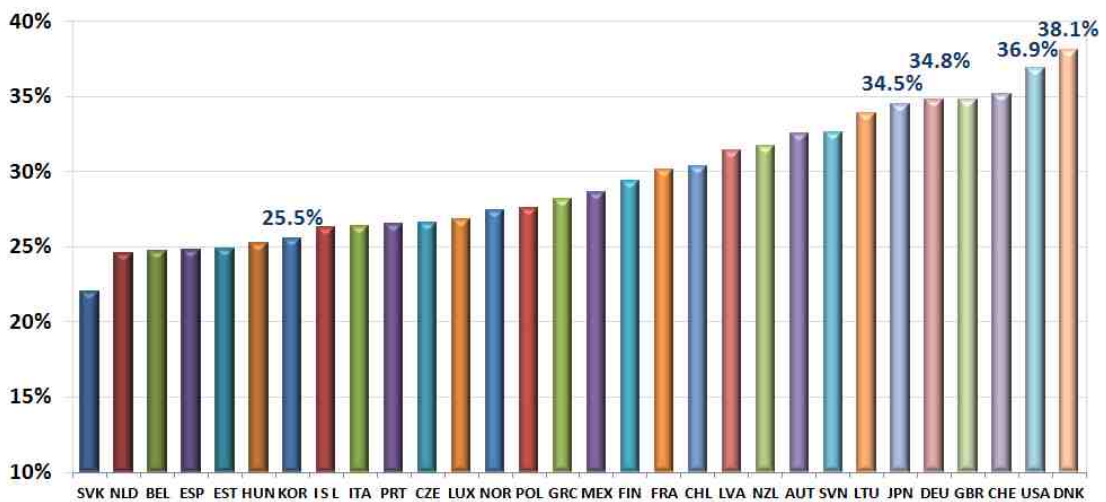
- 2015년 기준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율<sup>15)</sup>은 25.5%로 OECD 분석대상국 31개국 중 25위 수준에 불과

- 주요 제조업 강국들을 보면 미국(36.9%, 3위), 독일(34.8%, 6위), 일본(34.5%, 7위) 등으로 한국보다 10%p 격차를 나타냄
-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것은 동일한 가액의 상품을 팔아도 기업의 이익, 근로자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작아짐

-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준(準) 가공무역(加工貿易)형 산업구조 및 박리다매(薄利多賣)형 생산구조가 여전히 산업계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 준 가공무역형 산업구조에서는 핵심 부품 및 소재와 중요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물건을 팔수록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가가치가 높아짐
- 박리다매형 생산구조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고부가·고기술 시장이 아닌 저부가·저기술 시장에 통용될 수밖에 없음

< 제조업 부가가치율(2015년 전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계산.

15) 부가가치율이란 부가가치(value added)를 산출(gross output)로 나눈 비율로 계산되며, 부가가치는 산출에서 중간투입(intermediate input)을 제외한 부분임. 따라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②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저성장 및 교역탄성치 하락으로 만성수요부족)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교역탄성치 하락으로 만성적인 글로벌 수요 부족 현상에 직면하면서, 해외수요에 의존하는 우리 제조업에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지속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저성장에 따른 만성적 수요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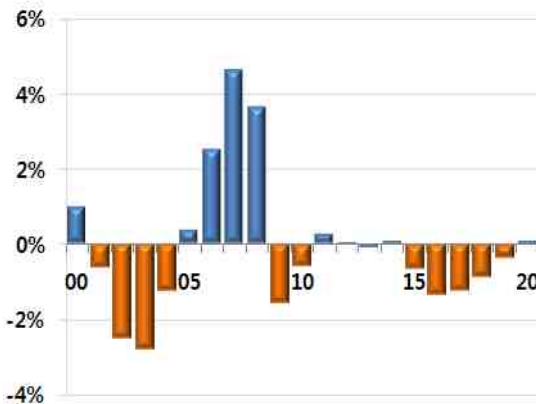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위기이전의 과잉생산 능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00년대 중반 세계 경제의 호황 국면 이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생산능력의 축소 조정이 여전히 미흡함
- 세계 GDP의 갭(gap)률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값(수요 부족)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임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수요회복이 더딘 가운데, 2015년 이후에는 신흥국들도 수요부족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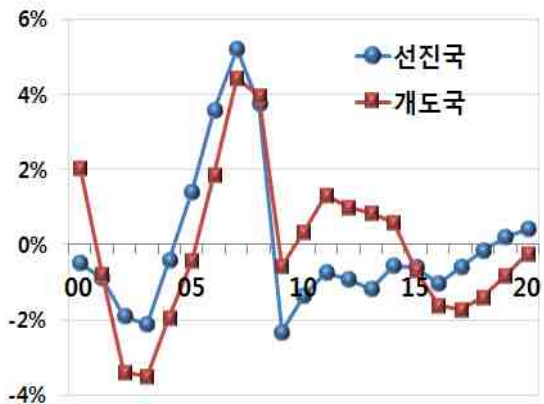
- 금융위기 직후 선진국들은 수요부족이 지속중이며, 개도국들은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수요부족 국면으로 진입하는 상황임

< 세계경제의 GDP 갭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 선진국 및 개도국의 GDP 갭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나타나는 가운데,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마저 하락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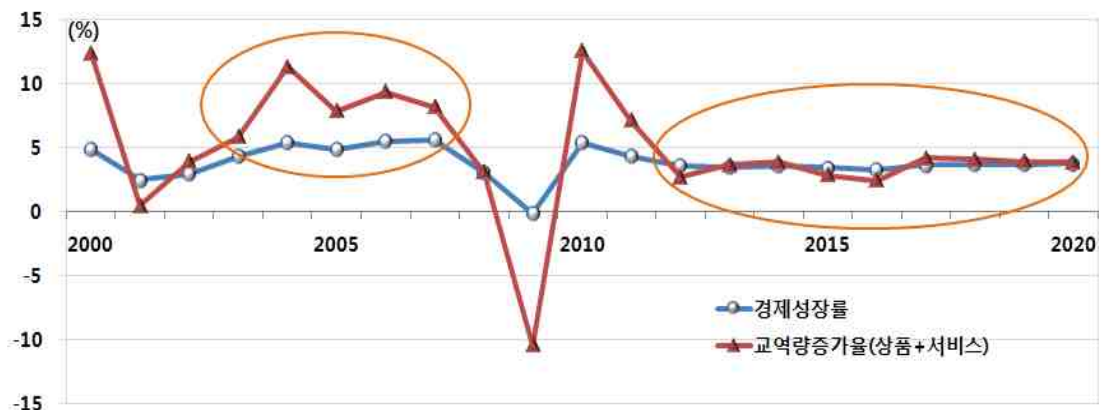
- 세계경제의 호황기인 2000년대 중반과 최근의 세계경제성장률은 큰 차이가 존재

- 세계경제성장률은 호황기인 2003~2007년 연평균 5.1%인 반면, 최근인 2012~2017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3.5%에 불과함
- 최근 세계경제에는 2000년대 중반 호황기의 IT 산업의 활황, 중국의 고성장, 미국의 통화팽창과 같은 성장 동력이 부재하기 때문임

- 저성장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의 호황기와 최근의 또 다른 특징적 차이는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의 급락

- 교역량증가율은 호황기인 2003~2007년 연평균 8.5%인 반면, 최근인 2012~2017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3.3%에 불과함
- 이에 따라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는 2003~2007년 연평균 1.64배에서 2012~2017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0.94배로 하락함
- 교역탄성치 급락의 원인은 200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던 IT 산업이 중간재(부품·소재) 국제분업구조가 복잡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중국이 전개했던 공업발전전략에 따라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중장기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량증가율 >



자료 : IMF.

○ 세계 경제의 수요 기반이 취약해져 수출(해외수요)에 의존하는 국내 제조업에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 제조업의 과잉생산능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생산능력 대비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후 2010~2012년 기술적 반등효과로 생산증가율이 생산능력증가율을 상회함
- 그러나 2013년 이후 글로벌 저성장(수요 회복 미흡) 영향으로 생산능력이 증가하는 속도에 생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장기화 됨

- 한국 제조업은 2011년 이후로 평균가동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재고율<sup>16)</sup>이 상승하는 전형적인 과잉공급 국면의 모습을 시현

- 최근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1년 80.5%에서 2017년 72.6%로 지속적 하락하였는데 2017년 72.6%는 2009년(금융위기) 74.4%보다 낮은 수준임
-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2010년 월평균 80.8%에서 2017년 102.7%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중임

< 제조업 생산 및 생산능력 지수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주 : 3년 이동평균.

< 제조업 평균가동률 및 재고/출하비율 >



자료 : 통계청.  
주 : 재고율은 월평균.

16)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을 의미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③ 양날의 칼 중국경제 (기회요인에서 위협요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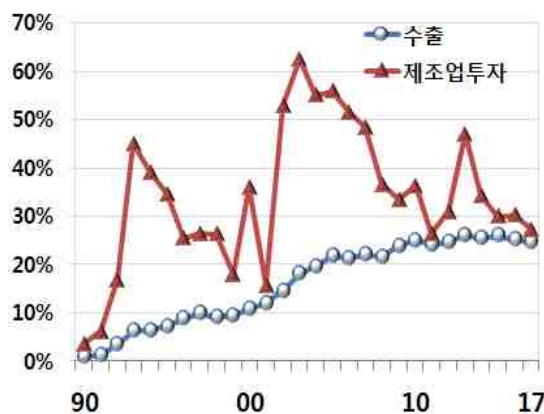
중장기적 위협요인은 한국 제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언젠가는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이며, 단기적 위협요인은 이제는 중국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의 수요처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상대라는 점

○ 한국 제조업의 수출과 투자의 대중국 의존성이 과도한 상황이며, 이는 우리 제조업에 기회요인이나 만약 중국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위협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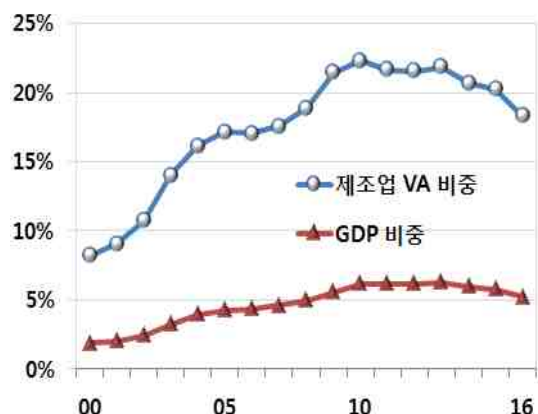
- 우리 제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과 투자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기록
  - 2017년 현재 대중수출/총수출 비중은 24.8%로 다른 주요 수출시장(ASEAN 16.6%, 미국 12.0%, EU 9.4%, 일본 4.6%)과 큰 비중 격차를 기록함
  - 2017년 현재 우리의 대중 제조업 투자비중은 27% 수준이며, 2002년 이후 누적 해외투자 기준으로는 40%에 달하는 수준임

-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수출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6년 현재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의 18.3%, GDP의 5.2%를 기록
  -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수출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00년 8.2%에서 2010년 22.3%, 2016년 18.3%를 기록함
  - 이를 국내 GDP에 대한 비중으로 환산하면 2000년 1.9%에서 2010년 6.2%, 2016년 5.2%에 달하는 수준임

< 대 중국 수출 및 제조업투자 비중 > < 대중국수출 부가가치의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 및 GDP 대비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통계를 이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

○ (중국시장 규모의 경제적 이점) 대규모 경제가 소규모 경제에 비해 가지는 이점인 '규모의 경제'에서 한국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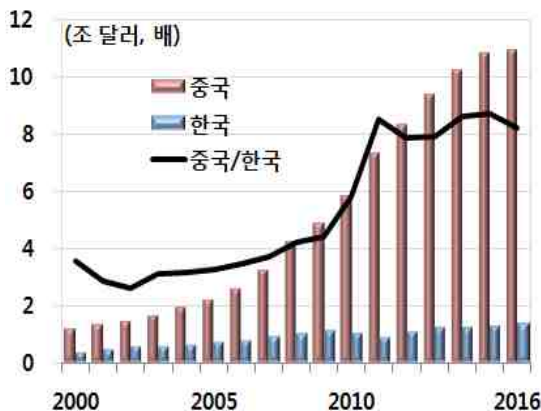
- 중국은 한국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크다는 장점(충분한 시장수요, 규모의 경제로 비용절감, 테스트 베드)을 보유

- 중국 내수시장 규모는 2000년 한국의 2배 수준에서 2012년 이후 8배로 급성장함
- 2000년 기준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1조 1,860억 달러로 한국 내수시장 규모인 3,340억 달러의 3.5배에 해당됨
- 2016년 기준으로는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10조 9,680억 달러로 한국 내수시장 규모(1조 3,370억 달러)의 8.2배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됨

- 특히 중국 제조업 R&D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산업 효율성이 빠르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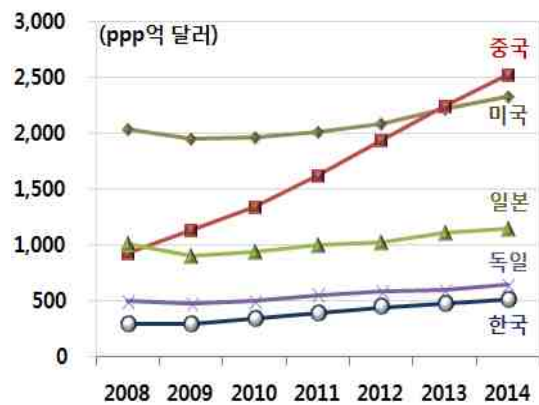
- 중국의 제조업 R&D투자 규모는 2008년 927억 PPP달러로 미국의 2,038억 PPP달러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4년에는 2,525억 PPP달러를 기록하며 미국(2,215억 PPP달러)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함
- 2014년 한국의 제조업 R&D투자 규모는 509억 PPP달러로 중국(2,525억 PPP달러)의 20% 수준이며, 중국과 한국의 제조업 R&D투자 격차는 2008년 635억 PPP달러에서 2014년 2,016억 PPP달러로 더욱 확대됨

< 한중 내수시장 규모 및 중국/한국 시장 비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UN 통계를 이용한 계산.

< 제조업 R&D 투자액 규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OECD 통계를 이용한 계산.

○ (중국 글로벌 기업의 증가) 내수시장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의 빠르게 성장

- 거대한 내수시장 규모의 이점을 가진 중국 내 거대 기업들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 포춘(Fortune) 세계 500대 기업수를 보면 중국은 2000년 12개에서 2017년 103개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11개에서 15개로 4개가 증가함
- 특히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기업수(103개)는 한국(15개), 일본(52개)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134개)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 들어 많은 중국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에도 나서고 있어 향후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R&D 규모 1,000대 기업 수는 한국이 25개로 중국(16개)보다 많은 수를 기록함
- 그러나 불과 7년 후인 2017년의 경우 한국은 25개로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은 100개로 급증하면서 한국 기업수의 4배 규모를 기록함

< 포춘 세계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수 >



자료 : Fortune.

< 주요국 세계 R&D 규모 1,000대 기업수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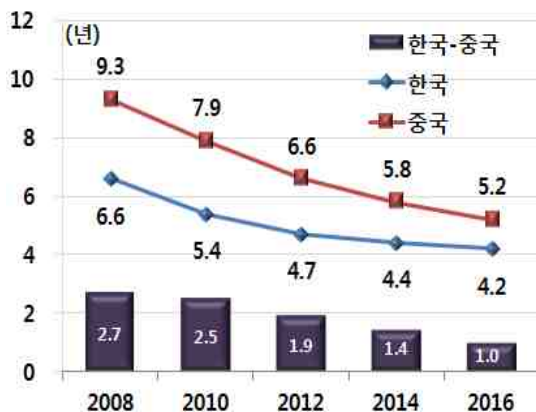
○ (중국 기술경쟁력 급상승)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축소되는 가운데, 중국의 고기술제품 수출 비중이 한국 수준에 육박

-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2008년 2.7년에서 2016년 1.0년으로 빠르게 축소
  - KISTEP의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범위에 대한 표본수의 한계가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2008년 2.7년에서 2016년 1.0년으로 축소됨
  - 2008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국가와의 기술격차는 한국이 6.6년이며 중국은 9.3년으로 한중간 격차는 2.7년임
  - 한편 2016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국가와의 기술격차는 한국이 4.2년이며 중국은 5.2년으로 한중간 격차는 1.0년임

- 중국과 한국의 고기술 수출<sup>17)</sup> 비중은 2015년 현재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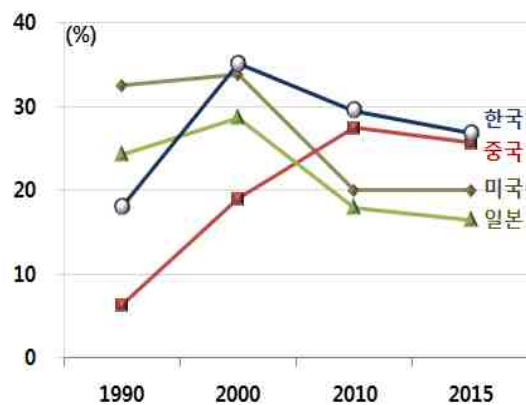
- 고기술제품(R&D집약도가 높은 업종) 비중은 1990년 한국이 18.0%, 중국이 6.4%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11.6%p가 높은 비중을 기록함
- 2015년 현재로는 한국(26.8%)과 중국(25.8%)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세계 최고 기술국가 대비 한중 기술격차 >



자료 : KISTEP<sup>18)</sup>.

< 주요국 고기술수출/총수출 비중 >



자료 : World Bank.

17) 고기술 수출(High-technology exports)이란 항공, IT, 제약, 연구장비 등과 같이 R&D집약도(R&D intensity)가 높은 제품의 수출을 의미.

18) 과학기술 분야 샘플수는 2008년(90개), 2010년(95개), 2012~'206년(120개).

④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비용)

노동시장에서 노사협력, 고용관행, 임금결정 등에 경직성이 과도하여 노동생산성 경쟁력이 취약하고, 특히 그동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주도하던 제조업 노동생산성마저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시장에서 노사협력, 고용관행, 임금결정 등에 경직성이 심한 것으로 판단

- WEF 경쟁력 부문중 노동 부문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WEF 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중 2017년 기준 노사 부문의 경우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137개국중)에 불과함
  - 이외 정리해고비용 112위, 고용/해고관행 88위, 임금결정유연성 62위 등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취약함

-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임금이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결정
  - 전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2002년 이후 민간협약임금인상률은 거의 대부분 물가상승률은 물론 노동생산성증가율을 크게 상회함
  - 최근 3년(2015~2017년) 민간협약임금인상률은 연평균 3.6%로 노동생산성증가율(-7.5%) 및 소비자물가상승률(1.2%)을 크게 상회함

< WEF 한국 노동부문 경쟁력 순위(2017) >



자료 : WEF.  
주 : 137개국 기준.

< 민간협약임금인상률 및 비교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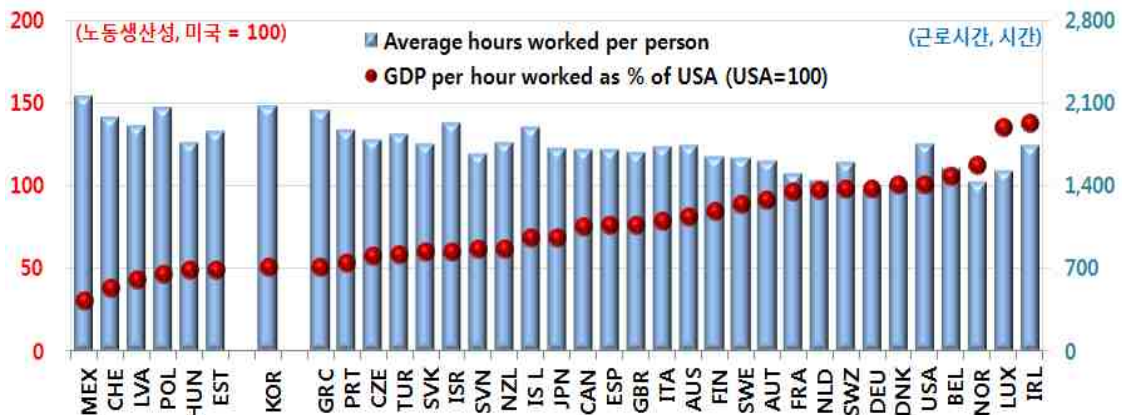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생산성본부.  
주 : 2017년 노동생산성은 수치만 제시.



- (노동생산성 경쟁력 취약) 한국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 한국의 경제 전체의 근로자 연간근로시간은 OECD 35개국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
  - 2016년 기준 한국의 경제 전체의 근로자 연간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5개국중 멕시코(2,143시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보이는 독일(1,359시간)의 1.5배에 해당 되는 규모임
- 그러나 한국의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생산액, current PPP기준)은 OECD 35개국중 29위에 해당될 정도로 취약한 모습
  - 한국의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생산액)은 미국의 49.5% 수준에 불과하며 OECD 35개국중 29위를 기록함
  - 한국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가지는 국가들로는 멕시코, 칠레,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6개국뿐임
- 한국은 근로시간은 많으나 노동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근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OECD 국가 노동생산성(미국=100기준) 및 연간근로시간(2016년) >



자료 : OECD.

○ (제조업 노동생산성 하락) 그동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주도하던 제조업 노동생산성마저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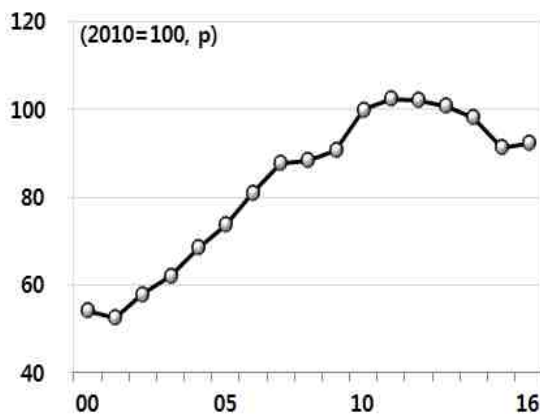
- 생산성본부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 추세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최근까지 하락세로 반전

-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001년 52.5P에서 2011년 102.5p까지 상승, 금융 위기 기간인 2009년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함
- 그러나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되면서 2016년에는 92.3p를 기록함

- 최근 제조업 노동생산성 하락의 원인은 산출량이 정체되는 가운데 노동투입량이 많아졌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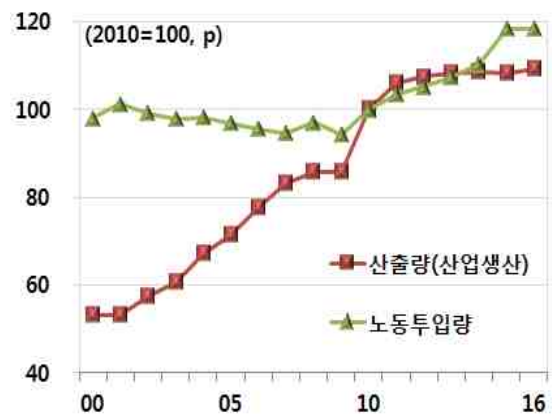
- 노동생산성(산출량지수 ÷ 노동투입량지수 × 100)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인 산출량지수는 2011년 106.0p에서 2016년 109.3p로 3.3p 증가하는 데에 그침
- 그러나 노동투입량지수는 2011년 103.4p에서 2016년 118.5p로 15.1p나 증가함
- 즉, 산출량지수(산업생산)는 정체되는 모습이나 노동투입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제조업 노동생산성(산출량/노동투입량)지수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 제조업 산출량지수 및 노동투입량지수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통계청, 고용노동부.  
 주 : 노동투입량지수 = 근로자수 x 근로시간.

⑤ 비우호적 기업 환경 (체감하기 어려운 규제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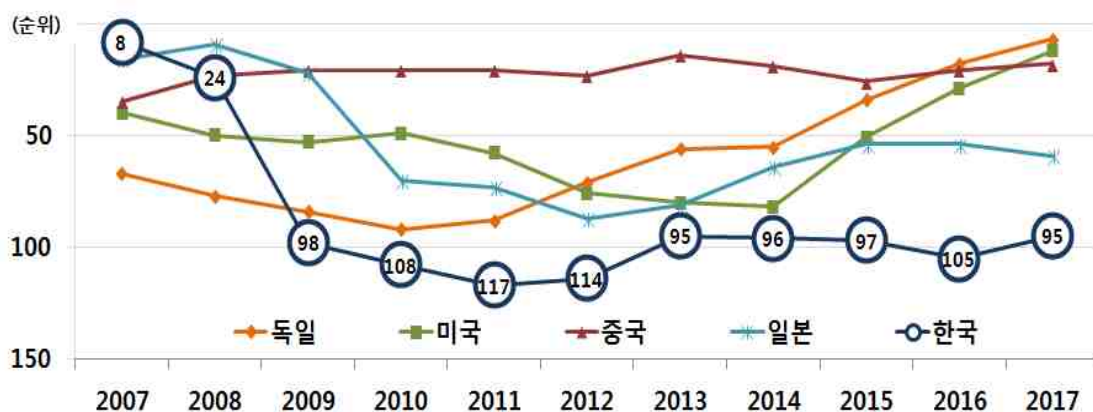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규제 개선 미흡, 생산비용 급증, 내수시장의 한계 봉착,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생산시설을 유지할 유인이 감소하면서 해외시장에 대한 직접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

○ (기업들의 높은 규제 부담) 국내 기업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는데, 한국시장에서의 규제 부담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

- WEF의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를 보면 2017년 현재 한국은 95위로 2017~2018년 통계치가 추정된 137개국중 하위권을 기록

- 2009년 이후 한국의 순위는 거의 100위권 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관찰됨
- 그러나 2007년의 경우 한국의 순위는 8위로 주요 경쟁국인 미국(40위), 중국(35위), 일본(16위), 독일(67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경험이 존재함
- 특히 중국의 경우 2008년 이후 20위 내외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중국의 정부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 정도는 미국, 독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순위를 시현함

< WEF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 순위 >



자료 : 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주 : WEF 자료에는 2017년의 경우 2017~2018년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음.

○ (규제개혁 체감 미흡) 모든 정부들마다 규제개혁을 중점 국정과제로 언급하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규제의 수나 강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

- 2009~2016년의 기간 동안 행정부의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건수는 총 8,878건(연평균 1,110건)임

- 2009~2016년의 8년 동안 신설 및 강화된 규제가 9,715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837건(8.6%)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및 개선 권고가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원안동의 즉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총 8,878건으로 연평균 1,110건의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됨
-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총 규제건수(주된규제 + 부수적규제)는 2009년 1만 2,905건에서 2013년 1만 5,269건으로 증가함<sup>19)</sup>

-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 17대 국회('04년 5월~'08년 4월)의 총입법건수는 3,773건에 불과하였으나, 19대('12년 5월~'16년 4월)에는 7,429건으로 급증함
- 17대('04년 5월~'08년 4월)의 의원입법/총입법 비율은 59.3%에 불과하였으나, 18대('08년 5월~'12년 4월) 62.6%, 19대('12년 5월~'16년 4월) 72.0%, 20대('16년 5월~'20년 4월) 72.1%로 상승하는 추세임

< 신설 및 강화 규제 건수 >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 행정부 및 의원 입법 수 >



자료 : 대한민국 국회.

주 : 20대는 2018.4.2. 현재 기준.

19) 규제개혁위원회는 2013년까지 규제건수(주된규제+ 부수적규제)를 발표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현 시점에서 전체 규제건수를 확인하기 어려움.

#### 4. 주력산업의 활로

첫째, 성장의 원천 및 분배의 재원이 되는 산업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리부팅이 필요하다.

- 「先성장, 後복지」 또는 「先복지, 後성장」 모두 성장과 복지 어느 한 쪽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상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해 성장·복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기계적 균형에 불과함
- 산업 활력이 사라질 경우 성장정책이든 분배정책이든 간에 소요되는 재원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성장·분배 간 상충관계 딜레마에 스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임

둘째,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현재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 주력산업의 기반이 취약할 경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언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기초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 현재 우리 주력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주력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예와 같은 사후 수습이 아닌 위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임

셋째, 산업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역량 확보 및 정부의 실효적 지원 간 유기적 결합이 요구된다.

- 산업정책의 큰 방향에서는 산업간 구조의 낙후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혁 전략이 마련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산업의 핵심경쟁력이란 결국은 연구개발활동과 그 산업적 성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R&D의 낮은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민간 R&D에 개방형 혁신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폐쇄적 기업 문화의 전향적 개선, R&D의 아웃소싱 생태계 조성, 지적재산권 제도의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한편 공공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거버넌스가 요구됨<sup>20)</sup>
  - 지금과 같이 정부 부처 중심의 공공 R&D 관리는 물리적 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공공 R&D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 가지 방법으로 정출연 연구소의 연구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넷째,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기업의 유연성 및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글로벌 성장 및 산업의 구조 변화로 만성적 수요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의 기반붕괴 방지 및 경쟁력 확충을 위한 산업 단위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임

20) 공공 R&D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원영(2018), “과학기술투자의 정치경제학”, 과학문화진흥회 발표자료(2018.4.3.)」를 참고하기 바람.

- 다만 구조조정은 획일적인 잣대가 아닌 산업별 특성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 피해와 중장기적 기대효과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내 금융논리와 산업논리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정부 내 충분한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기업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 조직, 자금, 마케팅 등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으나, 자칫 그 과정에서 핵심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다섯째, 중국의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對 중국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 중국과 경쟁심화 업종에 대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시장을 내어주는 것과 경쟁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산업계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함
- 우선 대중 수출구조가 중간재 중심에서 최종재 중심으로 품목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인도, 아세안 등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발굴 및 공략에 주력해야 할 것임

여섯째, 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산업정책에 노동 시장정책을 맞추어야 한다.

- 주력산업의 성장이 막혀 고용흡수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용의 유연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생산성이 하락하여 경쟁력이 취약해 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중노동시장구조의 개선, 고용과 해고의 자유도 제고, 협력적 노사관계구축, 성과주의(생산성=임금) 확산 등의 시장 개혁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 한편 노동시장의 개혁과 더불어 혁신적 생산방식의 확산,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일곱째, 산업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기업활력 부활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 정부의 다양한 시장 개입이 '시장 실패의 보완', '시장경쟁의 공정성 확보', '균형성장'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분명함
-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은 본질적으로 민간의 자유 영역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기업활력의 저하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최소한의 접점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參考文獻】

IMF(2017),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7)』 .

이원영(2018), “과학기술투자의 정치경제학”, 과학문화진흥회 발표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7),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위기상황』 .

현대경제연구원(2012), “고성장-저부가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 효율성 제고 방안”, 현안과 과제, 12-40.

현대경제연구원(2013),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주평, 13-37.

현대경제연구원(2014),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경제주평, 14-45.

현대경제연구원(2017),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현안과 과제, 17-32.

현대경제연구원(2018), “2018년 국내 10대 트렌드”, 경제주평, 18-01.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